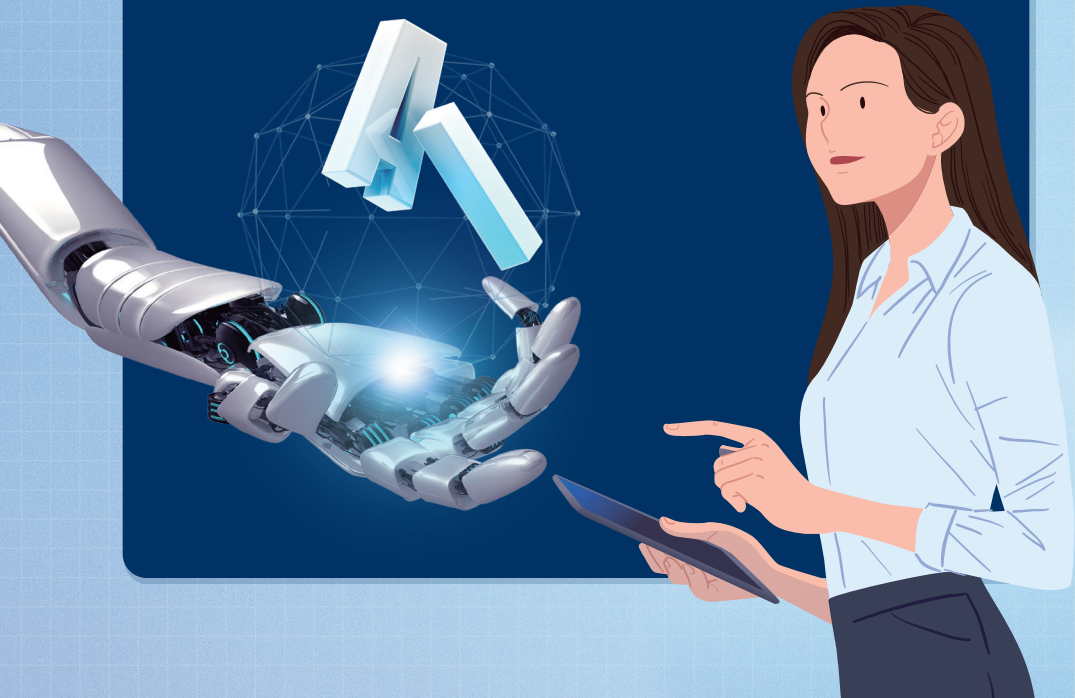




해외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사례와 시사점

윤필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왜 지방정부인가?

AI 혁신, 이제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합니다

AI는 연구실 안의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인적자원과 결합해야
성장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지역 경제를 재편하는
핵심 엔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례 1



프랑스 일드프랑스

지역기업 지원형

“지역 내 중소기업 집중 지원”

100개 이상 기업 지원

디지털 및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전략 채택

· 지역기업 AI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AI 현장도입 지원

·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간 연계

항공, 철도, 보건 등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간 장기 협업 형성



사례 2



캐나다 퀘벡

생산성 제고형

“지역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75억 캐나다 달러(약 7.5조원)
투자 계획

- 주정부 주도의 연구·혁신 투자
지역거점 중심의 AI 투자·연계
- 산업현장 AI 기술도입 지원
지역산업 기술도입 지원 및 공동투자



사례 3



미국 매사추세츠

인프라 구축형

“지역 주도의 고성능 AI 연산자원 확보”

2030년까지 1억 2000만 달러 투입
고성능 컴퓨터 센터 구축

·연산 인프라 직접 투자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통한 공공 AI 인프라 구축

·주민 대상 무료 AI 교육
AI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사례 4



독일 바이에른

연구기반 강화형

“지역 중심의 SI 연구역량 강화”

신규 SI 교수직 확충
및 55억 유로 SI 연구 투자

· 지역 내 SI 연구 네트워크 형성
고등교육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교육-산업 연계

· SI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과학·산업 전문가 구성을 통한 SI 정책·사업 추진



행정-산업
연계를 통한
AI 기능 강화

해외 AI 정책 3대 요인

전담 행정기구
운영을 통한
지속성 확보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한
중장기 정책 추진





제언 1

나열식 사업에서 ‘지역 특화 전략’으로

백화점식 지원이 아닌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 특화형 AI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행정의 확장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가 요구됩니다.





제언 2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의 SI 정책’으로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 연계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산업기반 강화를
연계한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결론

인공지능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AI 정책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